

12일 Market Index	
<b>코스피</b> 2574.82 (+37.22)	<b>코스닥</b> 729.49 (+7.99)
<b>금리</b> (미국 9년) 2.550 (-0.010)	<b>환율</b> (원-달러) 1452.30 (-5.90)



## 수출·내수 등 경제지표 곳곳 빨간불... 불황터널 갇히나

### ⚠ 긴급점검 이제 내리막길인가

건설 부문이 긴 시간 불황에 빠져 있고 제조업 전반이 어렵다는 수치가 쏟아진다. 국내외 불확실성이 짙어지는 가운데 속속 나오는 경제 지표에서 한 줄의 긍정적 신호나마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일시적인 하락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한국 경제가 고점을 찍고 내리막길로 접어들어 가는 우려까지 나온다. 좀처럼 혼돈을 벗어 나지 못하는 정치환경, 이례적 수준의 고환율을 비롯한 미국발 악재 등과 마주한 한국 경제의 곳곳을 들여다본다.



이달 10일 서울 시내의 한 상가건물이 공실로 방치돼 있다. /뉴시스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고환율·저성장 고착화 우려  
탄핵정국도 불확실성 더 키워  
기업경기 전망 최장기 '부진'**

#### - 글 쓰는 순서 -

#### 1. '피크 코리아' 그림자 드리운 韓 경제

2. 경제는 심리... 모든 경제주체 위축
3. 경제 이끌 기업들 "앞이 안 보인다"
4. 소비시장 주체 가계 "살 돈이 없다"
5. 리더십 없는 정부 "백약이 안 통해"

국내총생산(GDP)의 연간 증가 폭이 둔화한 데다 분기별로는 이따금 역성장도 나온다. 우리 경제엔 저성장이 이미 고착화했다. 또 원·달러 환율이 무려 석 달 넘게 1400원 선을 웃돌면서 수입원자재를 끌어다 생산하는 기업들이 막대한 비용 부담을 떠안았다. 산업 생산·소비·투자 등 3개 부문 모두가 줄어드는 현상도 최근 수년간 빈번하다.

수출 기업들은 트럼프발 관세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각자도생을 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내수 경기는 상당 기간 침체돼 있다. <관련기사 3면>

정치를 둘러싼 환경은 예기치 못한 사건들의 연속이다. 지난해 12월 중순 윤석열 대통령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수개월 내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

이달 들어 발생한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구속 취소·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등은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여부와도 관계없다.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 1심 선고 전 장소·시간에 구애받지 않

고 변호인단·정치권 인사들과 임의로 만날 수 있다. 법원의 최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소 1~2년 내지 그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도 모른다.

정부·기관에서 주기적으로 공개되는 지표들 속에서 향후 전망과 관련한 긍정적 신호는 찾아보기 어렵다.

기업들의 생산이 줄었고, 특히 제조업에서 내수와 수출 모두에 빨간불이 켜졌다. 불안전 고용 상태에서 버티는 청년층이 늘어났다는 소식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코로나19 이후 정상화와 맞물려 기준금리가 계속 치솟았다. 이 같은 고금리는 기초체질이 취약한 경제분야 곳곳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를 초래했다.

지난달 20일 한국경제인협회 발표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를 보면 올해 3월 BSI 전망치가 90.8에 그쳤다. 2022년 4월부터 36개월째 기준선 100을 하회한 것이다. 역대 최장기 부진 기록을 매일 경신 중이다. 기준선 100보다 높으면 전월보다 긍정적 전망을,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전망을 가리킨다. 분기별로 보면 경기전망 회의론이 더 짙게 나타난다. 올해 1분기 기준 BSI 전망치는 87.5를 기록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분기(64.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가계대출 한 달새 4조 꺾음

12일 오후 서울시내 한 은행 외벽에 대출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이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2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에 비해 4조 3000억원 증가했다. 새해 금융권 가계대출이 본격 재개되고 신학기 이사 수요가 겹치며 지난해 11월(5조원) 이후 3개월 만의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전월에 비해 5조원 증가했다. /뉴시스

## 유산 물려받은 만큼 낸다 상속세 75년만에 대수술

#### 기재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정부가 1950년 도입 후 7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 과세 체계를 대수술한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상속받는 사람)이 실제로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이 커지면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여러명에게 과세표준이 분산돼 세부담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해 과세 방식, 과세 대상, 공제 등을 새로운 제도에 맞게 개편한다. 과세 방식은 사망자의 전체 상속 재산에서 상속인이 취득하는 재산 기준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 15억원의 유산을 자녀들이 상속 받을 경우 현행 세제에서는 30%의 세율(5억원 일괄공제 가정시)이

적용돼 2억4000만원 정도 세금을 상속인들이 나눠서 내야 한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부과 체계를 전환할 경우 2명의 자녀가 7억5000만원을 상속 받으면 세율은 20%로 낮아지고,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산출세액은 4000만원 아래로 떨어진다. 또 상속인이 3명일 경우에는 일괄공제만 적용해도 세부담이 0이 된다.

과세 대상도 정비했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일 경우 전세계 재산에, 비거주자일 경우 국내 소재 재산에 세금을 부과해 왔는데 앞으로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일 경우라도 상속인이 거주자면 전세계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사전브리핑에서 "실제로 납세하는 인원은 피상속인 기준으로 6.8%밖에 안 되지만, 유산취득세의 전환에 대해서는 3분의 2 가량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상속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것에는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韓 철강 면세쿼터 폐지... 축산업도 살얼음판

#### 트럼프, 철강 25% 관세 발효 韓, 상호관세 앞두고 긴급 대응 美, 소고기 연령제한 해제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관세전쟁에 본격 참전하게 됐다.

지난달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예고한 '관세 전쟁'의 신호탄 격인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방침이 12일(현지시간) 발효됐다.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가 지난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에 적용받던 기존 면세 쿼터(연간 263만t)는 폐기됐다.

이번 조치는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사례여서 주목받고 있다. 더군다나 트럼프는 지난 4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대미 관세가 미국보다 네 배 높다고 주장한 바 있어 관련

국내 산업계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오는 4월 2일에는 대부분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가 발효될 예정으로 이는 한국 경제에 강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 발효 전에 미국 측에 최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며 이번 주 중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워싱턴 DC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뿐 아니라 우리나라 축산업도 관세압박에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지난달 13일 '상호호혜적 무역과 관세'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관세, 불공정 관행 등을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가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를 한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정식 요청했다.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2008년 자유무역협정 이후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크게 향상됐다고 주장했다.

NCBA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유통 제한은 한국에서 민감한 사안으로, 무시해선 안 되는 문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중국·일본·대만에선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며, 한국에서도 유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우병'으로 알려진 소해면상뇌증(BSE)에 대해 "미국은 가장 엄격한 기준과 최고 수준의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한국과 협의를 통해 연령 제한을 없애고 양국 간 과학에 기반한 무역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규춘 기자 ch9720@

### 메트로 한줄뉴스



▲ 거리로 나가 총공세하는 야당... 의원 각자에 맡기고 신중한 여당  
▲ 박찬대 "심우정, 국민 원성이 취급하나... 즉시 항고 결자해지해야" /사진 뉴시스

▲ 권성동, 野 '이재명 암살 제보' 주장에 "정치인 테러 있어선 안 돼"  
▲ 여, 선관위 '채용 비리' 재차 난타...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모자라"

▲ 경호처 "인천공항보안 사장 경호처 출신 내정설 사실 아냐"  
▲ 한미 해병대, 연합 소대 편성해 산악작전 등 훈련 실시